

마지막 대정부 질문 유은혜 등판... 버르는 野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오늘 교육·사회·문화 분야 보수 2야, 임명강행 비판 “청문회 2탄으로 만들겠다”

개천절인 3일 하루를 쉬던 국회는 이번 정기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이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문제를 놓고 다시 한 번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정부질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나선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삼화 의원이 각각 출격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조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출석한다.

관심은 전날(2일) 임명된 유은혜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로 쏠리고 있다. 야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유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기 위해 현충탑으로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 사람만은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구 위한 정권이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흠결이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것이냐”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휴일인 이날에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유은혜 청문회 2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 한국당 의원은 “유 부총리 낙마를 요구하는 국민원정도 올라와 있는 등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인사다”며 “반대 여론에도 임명을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책임을 지적하고 유 부총리 임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의) 부적격 사유에 대해 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돌아가며 지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유 부총리의 임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부분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밝혀졌다고 보고, 야당에서도 유 부총리에 대한 발목잡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수장으로 서 어떠한 철학으로 교육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유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은 거쳤는데 야당은 여전히 정략적 태도를 취하면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정부질문은 향후 정책의 청사진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휴일에도 심재철 난타전

여 “기재위 사퇴해야”... 한국당 “정부·여당 사과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3일에도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였다. 우선,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벌인 설전이 김 부총리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하며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지만, 이미 언론에 흘린 내용의 재판이었다”며 “심 의원은 빨리 자료를 반납하고 기재위를 사임하는 것만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역시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국정감사 위원회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 소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없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 기간에 (기재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야당에 대한 폭거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열람 과정을 시연함으로써 자료 획득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美, 한국정부 희망 감안해 입장 정리”

민주 대미 특사단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상응조치’ 요구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충분히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을 풍겼다고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사단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주미에 전 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주당 특사단은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상응조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 같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와 관련, 외교관 출신으로 특사단에 속한 이수혁 의원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희망과 바람을 많이 감안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사단은 지난달 30일부터 3박4일 일정을 미국을 방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등 백악관과 행정부의 비핵화 실무총괄과 상원 국방·외교위 소속 의원들,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싱크탱크 인사들과 두루 면담했다.

특사단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및 후커 보좌관과 “비핵 관계, 비핵화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둔 미국 정부의 분위기와 관련해선 “상당히 고민하고, 굉장히 진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0·4선언 남북행사에 6·15 남북위도 참여

이해찬 민간 행사 통합 제안... 오늘 방북 2박3일 일정

평양에서 4~6일 치러지는 10·4선언 공동행사 민간방북단에 6·15공동선언실천 남북위원회도 참여한다. 통일부는 3일 “6·15 남북위와 지속 협의회 최종적으로 남북위에서 9명이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15남북위의 참가로 이창복 남북위 상임대표의장이 공동대표단에 추가됐다. 이로써 공동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이번에 9명이 참여하는 6·15남북위의 경우 앞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등을 문제 삼아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초

6·15남북위는 10·4선언 계기 공동행사를 이날 중순 여는 안을 두고 6·15북측위와 논의하고 있었고, 민화협 역시 이날 말 급강산에서 상봉대회를 여는 쪽으로 북측 민화협과 협의 중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으로 남북 정상은 “10월 초 평양 행사 개최”에 합의하고,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행사들을 통합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단체별 방북 인원 할당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북단은 4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

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향한다. 도착 당일 숙소인 고려호텔에 짐을 풀 뒤,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고 이어 평양대극장에서 환영 공연을 관람한 뒤 인민문화공전에서 환영 만찬을 갖는다. 또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기념행사인 민족통일대회가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리고 오후는 육류관에서 진행된다. 이어 만수대장작사·만경대학생소년공연을 참관한 뒤 대집단 체조·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체류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중앙식물원을 참관한 뒤 귀환길에 오른다. 방북 기간에는 조 장관 등 당국 방북단과 북측 사이에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법농단 관련 의혹’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가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용실 외에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등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조강특위 구성 ‘주춤’

일부 후보 위원 고사에 난항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주도할 조강특별위원회(조강특위)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은 애초 지난 1일 당형위원장 전원을 일괄 사퇴시키고 곧바로 조강특위를 발족해 당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3일 현재까지 조강특위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조강특위에는 당원적인 김용태 사무총장(위원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외부 위원인 전원택 변호사 등 4명의 참여만이 확정

된 상태다. 나머지 외부 위원 3명은 전 변호사가 전권을 갖고 발탁하기로 했지만, 접촉한 인사 중 일부가 고사하면서 전체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하마병에 오른 인물들은 소설가 이문열씨와 이진권 전 당 윤리위원장, 이영에 전 판사 등이다.

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 당형 교체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기준으로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당은 조강특위 운영 과정에서 외부 위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